

05

국방·병무

1.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☎ 02) 748-5105

군무원 공개경쟁시험 일부 응시직렬에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.
- 그러나, 2016년부터는 사서,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기존 응시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·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.

군무원 채용시험 자격증·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

- 추진배경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채 시험시 자격증·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을 개선
- 주요내용 ① 필수직렬은 현행 자격증·면허증 응시자격 유지

행정직군		기술직군	
사서		환경, 전산, 항해, 약무, 병리, 방사선, 치무, 재활치료, 의무기록, 영양관리	
② 현재 자격증·면허증 자격제한 직렬(토목 등 30개)은 가점(3%~5%) 부여로 전환			
7급		9급	
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5%	3%	5%	3%

- 시 행 일 2016년 1월

2.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‘교차윗몸일으키기’로 개선

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 ☎ 02) 748-5157

장병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측정방법을 ‘교차윗몸일으키기’로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.

- 기존 측정방법이 목과 허리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각 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‘교차윗몸일으키기’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국방부는 2016년 장병체력검정 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
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 개선 추진계획

- 추진배경 현 윗몸일으키기는 목과 허리손상 초래
- 주요내용 ‘교차윗몸일으키기’로 시행방법 개선
 - ① 검정기준치 재작성: 2015년 12월
 - ② 장병 체력검정 시행지침 시달: 2016년 1월
 - ③ 부대관리 훈령(체육) 개정: 2016년 전반기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

3. 군내 「성폭력 예방교육」 확대 실시

인사기획관 국방여성정책과 ☎ 02) 748-5175

2015년 3월 ‘성폭력 근절 종합대책’ 시행에 따라 ‘국방인사관리훈령’을 개정하여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.

-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준을 기존 연간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합니다.
- 또한, 교육 미이수자는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

- 추진배경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
- 주요내용 ① (기존)연 1회 교육 → 분기 1회 교육 확대
 ② 교육 미이수자 인사상 불이익 부여(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 제외)
- 시 행 일 2016년

4. 국방부 「성폭력 신고앱」 운용

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☎ 02) 748-5176

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내에서 활용할 「성폭력 신고앱」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.

-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,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「성폭력 신고앱」을 개발하였습니다.
- 국방부의 「성폭력 신고앱」은 군 내부 신고체계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,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2016년도 성폭력 신고앱 운영

- 추진배경 성폭력 신고 상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운영
- 주요내용 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담관에 신고/상담
② 외부기관(해바라기센터, 성폭력 상담소)의 정보 및 관련 규정 제공
- 시 행 일 2016년 1월

5.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

국방부 예비전력과 ☎ 02) 748-5245

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 규정이 없었으나, 2016년 부터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이 규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
학생예비군 학업보장 조항 신설

- 추진배경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불이익 처분 금지 필요
- 주요내용 학생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참가시 학업보장 규정 신설
※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제10조의 2항, 「병역법」 제74조의 3, 4항
- 시 행 일 2016년 3월 예정

6.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실시

국방부 예비전력과 ☎ 02) 748-5238

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,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,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.
- 이는 예비군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(참고) 예비군 홈페이지 > 공지사항 > 16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

예비군훈련 입·퇴소 중 부상·사망시 국가가 보상

- 추진배경 예비군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필요
- 주요내용 재해보상금(사망·장애), 휴업보상금, 치료비 지급
※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제8조의 2 및 제9조, 「병역법」 제75조의 2
- 시 행 일 2016년 3월 예정
※ 시행당시 부상자/사망자부터 적용

7.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

국방부 예비전력과 ☎ 02) 748-5245

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면제 기준이 강화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였으나,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2016년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.
- 이를 통해 예비군훈련 면제자가 감소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참고) 예비군 홈페이지 > 공지사항 > 16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

국외체류 예비군의 훈련 면제 기준 강화

- 추진배경 국외출국 사유 훈련 면제자 감소 및 제도 형평성 제고
- 주요내용 국외 체류 중인 예비군훈련 면제 기준 강화
(국외 여행, 체류 시 180일 이상 → 365일 이상)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8.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

국방부 자원동원과 ☎ 02) 748-5225

동원령 선포시 동원예비군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현재 동원예비군에게 지휘서신을 발송할 경우 소집부대별로 전자메일 또는 군사우편만을 이용하였으나, 2016년부터는 기존 전자메일, 군사우편 외에 동원지정부대, 소집일시, 직책 등 동원예비군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휘 서신의 핵심내용을 ‘문자서비스’로 추가로 제공합니다.
-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이 동원령 선포 시 언제, 어디로 가야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비군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.

지휘서신 발송체계 개선

- 추진배경 전자메일 지휘서신 수신확인을 저조, 군사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소요 증가 등 지휘서신 발송 간 도출된 문제점 해소
- 주요내용 지휘서신 발송 시 기존 전자메일 외 문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
- 시 행 일 2016년 1월

9.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

국방부 복지정책과 ☎ 02) 748-6611

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을 생도,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생도,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교육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공상자에 대한 국가보상만 가능하였으나, 2016년 3월부터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자를 생도,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합니다.
- 2016년에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를 먼저 시행하고,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보험 보상 한도액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.

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「군인사법」상 군인의 신분에 해당하는 전 신분에게 보험적용 확대
- 주요내용 생도,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대상 확대
- 시 행 일 2016년 3월 21일 (잠정, 보험사 선정 후)
※ 1월 중 입찰유의서에 지급대상 확대를 반영하여, 3월 중 전우사랑보험 운용사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에 반영 예정

10. 병 봉급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 ☎ 02) 748-6613

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% 인상하였습니다.

-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,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2016년에는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%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.
-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,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병 봉급 인상

■ 추진배경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

■ 주요내용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% 인상

구분	병장	상병	일병	이병
2015년	171,400원	154,800원	140,000원	129,400원
2016년	197,000원	178,000원	161,000원	148,800원

■ 시 행 일 2016년 1월

11. 군인 수당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 ☎ 02) 748-6613

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.

-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였고, 임무수행 환경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- 특히,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하여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였고,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- 군인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군인 수당 인상

■ 추진배경 군인수당 인상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

■ 주요내용 ① 지급액 인상 : 특수지근무수당(병), 항공수당(갑),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(갑)1호(위관), 선박 및 함정근무수(을)1호(함정근무 항공기 정비요원), 잠수함 출동가산금, 위험근무수당 (을)호(저공강하자)
② 지급대상 확대 : 부사관장려수당(해병대), 위험근무수당 (병)호(한병), 위험근무수당 가산금(병), 대우군무원 수당 (예비전력 군무원)

■ 시 행 일 2016년 1월 (잠정)
※ 「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」 개정 후 지급 (1월부터 소급 가능)

12.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

국방부 복지정책과 ☎ 02) 748-6611

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며,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당행 월1회 면제되던 ATM 수수료를 당행, 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, 공중전화요금 할인폭 확대 등 1차 사업 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 또한,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, 교통카드 할인, 경조사 지원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확대로 금전적 수단 외의 방법으로 병 봉급의 추가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참고) 나라사랑카드 홈페이지 > 공지사항 >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

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

- 추진배경 장병 복지 증진 및 병 봉급을 금전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인상효과 제고
- 주요내용 ① 군마트 이용요금 적립
 ② ATM 수수료 당행/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
 ③ 병 무료 상해보험 보장범위를 영내 화재, 폭발, 붕괴사고까지 확대
- 시 행 일 2015년 12월 19일

13.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

국방부 문화정책과 ☎ 02) 748-6706

신세대 장병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,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정착하고자 민과 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를 격오지 부대에 설립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급하였으나, 2016년부터는 육·해·공군의 GOP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독서카페를 설립할 계획입니다.
- 이는 군이 민간기증과 병행하여 시설을 설치하고, “1소초(부대) 1출판사 도서기증” 시스템으로 도서를 확보하는 등 민·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가 될 것입니다.
- 이는 장병들의 교양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립

- 추진배경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지식 및 교양을 증진하여 무형 정신전력 강화
- 주요내용 ① 軍 민간기증과 병행 시설설치, 민 도서기증 시스템 구축(1소초 1출판사 MOU체결)
 ② 연도별 독서카페 설립 계획(안)

구분	계	2016년	2017년(안)	2018년(안)
부대(개소)	1,220	310	500	410 예정
예산(억원)	70.15	17.83	28.75	23.57

※ 육군 935개소, 해군 276개소(해병대 150개소 포함), 공군 9개소
※ 독서카페 구성: 서가대, 냉난방, 온돌, 테이블, 의자 등

14.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

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☎ 02) 748-5844

신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 관할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관할부대 협의 기간이 단축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.
- 그러나, 보호구역 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군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, 군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※ 사전상담: 민원인이 정식 협의 전에 기본 서류(현장사진, 지적도, 토지대장 등)를 제출하면, 관할부대에서 민원인의 협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

또한, 군과 협의 없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·가족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 개인·가족의 자연장지는 개인묘지와는 달리 군과 협의해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.
※ 자장지: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·화초·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
- 이와 같이 보호구역 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년 11월 18일부터 군과 협의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인·가족의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사항

- 추진배경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편익 증진
- 주요내용 ①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른 군 협의기간 단축(30일→20일)
② 보호구역 내 개인·가족 자연장지 설치 시, 군 협의 생략 가능
- 시 행 일 ① 군 협의기간 단축: 2016년 3월 2일(2015년 9월 1일 개정완료)
② 개인·가족 자연장지 설치 시, 군 협의 생략 가능: 2015년 11월 18일 시행

1.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

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☎ 02) 2079-6305

주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문턱을 대폭 낮추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.

-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부족의 해소와 사업정보의 불법유출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예비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회수는 기존 1회에 불과하였던 것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이후 제안요청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
- 업체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업일정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무기체계 성능·예산·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, 필요시, 소요결정 문서에서 비밀로 분류된 ROC, 소요량, 전력화시기 등을 보안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함
- 또한, 방산업체 이외의 일반업체에게도 정보 제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명회 참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방산분야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업체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추가적 행정 기간이 필요함에 착안하여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하도록 함
-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까지 정보제공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짐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방위사업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춤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알람소식 > 보도자료 > 「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」 시행 발령

제23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

- 추진배경 제23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
- 주요내용 ① 방위력개선사업 정보 조기제공(1회→수시, 단순히 사업일정 정보에 국한→성능, 예산, 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제공)
②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, 일반업체도 정보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밀취급인가 행정기간 고려 충분한 공고기간 부여(진입문턱을 크게 낮춤)
- 시 행 일 2015년 8월 31일

2.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 의무화

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☎ 02) 2079-6308

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.

- 폭발 등 안전 위해 요소가 있는 ‘군용 화약류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여 ‘군용 화약류’를 시험기관(국방과학연구소, 국방기술품질원 등)에 시험 의뢰 시 품질보증 의무화로 군용화약류 안전사고 예방강화가 필요하였습니다.
- 이에, 군용 화약류에 대한 시험 시 품질불량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력 제고하기 위하여 군용 화약류를 ‘시험기관’에 시험 의뢰시 의무적으로 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함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알림·소식 > 보도자료 > 「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」 시행 발령

제24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

- 추진배경 제24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
- 주요내용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강화(군용화약류 시험의뢰시 의무적으로 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)
- 시 행 일 2015년 10월 6일

3. 업체의 기술료 부담 완화

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☎ 02) 2079-6387

방위사업청은 「국방과학 기술료 산정·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여,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방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.
- 이에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그 협력업체 대한 기술료를 면제함으로써 우수한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,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기술료 정책 및 제도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기술료에 대한 이견 발생시 조정할 수 있도록 「기술료 심의 위원회」를 신설하였으며, 기술료 관련 업무부서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편의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알림·소식 > 보도자료 > 「국방과학 기술료 고시」 개정 발령

국방과학 기술료 업체 부담 완화

- 추진배경 연구개발 참여 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료 면제 적용
- 주요내용 ①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에 기술료 면제
② 기술료 업무창구 단일화 및 기술료 심의위원회 신설
- 시 행 일 2015년 12월 1일

4.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

방위사업청 사업분석과 ☎ 02) 2079-6533

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한 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전시·사변·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.
 - 2016년에는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을 일시 중단·점검하고, 이를 해소·해결한 후 사업추진을 재개함으로써 투명한 사업추진 여건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알람소식 > 보도자료 >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마련

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추진계획

- 추진배경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주요내용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 일시 중단후 집중점검 실시
- 시 행 일 2016년 1월 (잠정,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중)

5.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

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☎ 02) 2079-6843

감항인증기준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, 최신 감항인증기준을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감항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군 표준 감항인증기준 및 업무규정을 최신화하여 개정 하였습니다.

- 감항인증 기술기준, 적합성 검증방법을 구체화하고 항공기 운영군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.
 - 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(900개 → 952개)은 감항인증기준의 적용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감항인증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표준감항인증 개정

- 또한,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특히,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

감항인증제도 주요 개정사항

- 추진배경 국제적인 감항인증 기준 반영하는 등 군 감항인증 제도의 보완·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표준감항인증기준 최신화 (900개 → 952개)
 - ②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
 - 감항인증팀 구성시기,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업무절차 개선
- 시 행 일 표준감항인증제도(2015년 11월 13일),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(2015년 10월 6일)

6.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

방위사업청 일반장비계약팀 ☎ 02) 2079-4551

군수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인 군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201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수요자인 군이 정부에서 계약한 한 개의 낙찰 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을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.
 - 2016년에는 군 장병들 병영생활에 가장 민감한 급식류의 일부품목부터 군에서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업체의 품목을 선택하여 조달 할 수 있게 됩니다.
- 이로 인해 군수품 만족도 향상 및 국방조달시장에 다수업체 참여유도를 통한 경쟁 활성화, 군수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업무정책 > 법령 > 방위사업법 제46조 제5항

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2(군수품 선택계약)

2016년도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

-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 필요성, 낙찰위주의 저가입찰에 대한 폐해 차단 필요성
- 주요내용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한 가지 품목에 대해 다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, 군에서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업체의 품목을 선택하여 조달하는 계약제도
- 시 행 일 2016년 1월

7.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

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☎ 02) 2079-4114

국외조달원의 경우 신규 등록 시 구비요구 서류가 단순하여 패이퍼컴퍼니와 같이 계약이행능력이 미흡한 업체도 등록이 가능하였고 기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정보 최신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등록된 입찰참가자 정보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.

방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국외조달원을 식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「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」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국외조달원을 무역업, 무역대리업, 국외소재상사 국내지사로 구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법령에 부합된 용어로 명시하였으며,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를 기존의 4종에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입찰 및 계약서상의 서명권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입찰 참여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업무정책 > 법령 > 행정규칙 >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

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

- 추진배경 부실한 국외조달원의 입찰참여로 안정적 방위사업 관리 애로 발생
- 주요내용 ① 신규 등록 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추가
② 입찰심사 전까지 등록정보 최신화 및 3년마다 일제정비 실시
③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
- 시 행 일 2015년 7월 1일

8.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

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☎ 02) 2079-4173

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의 가격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.

- 「물품 적격심사 기준」의 가격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이행능력 평가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.
 - 이행능력 50%(50점): 가격 50%(50점) → 이행능력 60%(60점): 가격 40%(40점)
 - 확대된 이행능력 10%(10점)를 기술능력 심사분야에 부여 (10점 → 20점, 2배수)
- 벤처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업무·정책 > 법령 > 행정규칙 > 물품 적격심사 기준

낙찰자 결정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

- 추진배경 우수 중소기업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(VIP 지시)
- 주요내용
 - ① 「물품 적격심사 기준」의 가격평가 비중 축소 및 기술능력 평가비중 확대
 - ② 「물품 적격심사 기준」의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
- 시 행 일 2016년 5월 1일

9.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

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☎ 02) 2079-6831~9

수출업체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을 일원화하고, 수출·중개업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관은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, 일반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
 - 이에 따른 수출업체의 업무혼선 등을 해결하고자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.
- 또한, 수출·중개업 신고 대상이 일반방산물자 수출업체까지 확대하여 수출업체 및 방산물자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.

(참고) 방위사업청홈페이지 > 알림·소식 > 보도자료 >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와 수출허가 면제 신설

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

- 추진배경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·중개업 신고 대상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
 - ② 수출·중개업 신고 대상을 일반방산물자 수출업체까지 확대
- 시 행 일 2015년 9월 28일

1. 해·공군, 해병대 모집 시 수능·내신 성적 반영 폐지

병무청 현역모집과 ☎ 042) 481-2720

수능·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던 해·공군, 해병대 모집에서 성적반영이 폐지됩니다.

- 2016년 2월 입영자(2015년 12월 접수자)부터 해·공군, 해병대를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했던 수능(내신) 성적이 폐지됩니다.
 - 그동안 ‘군대도 성적순 인가?’ 언론보도 등 성적반영에 대한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또한, 개인의 자격·면허 및 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된 군복무를 통하여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 > 군지원(모병)안내 > 공지사향 > 2016년 달라지는 현역병 모집 제도

모집병 선발 시 수능(내신) 성적 반영 폐지

- 추진배경 불합리한 선발요소 개선으로 우수인력 충원 및 민원편익 제고
- 주요내용 ① 해·공군, 해병대 선발 시 수능(내신) 성적 반영 폐지
② 자격·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
- 시 행 일 2016년 2월 입영대상자부터

2.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

병무청 징병검사와 ☎ 042) 481-2948

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통하여 재징병검사 일자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 기간(11월)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나, 2016년부터는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관할 지방병무(지)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,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(지)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재징병검사 장소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

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 > 병무뉴스 > 공지사향 >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

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

- 추진배경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 재징병검사 대상 적용 확대
- 주요내용 ① 관할 지방병무(지)청 징병검사 기간 중 재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
②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(지)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자와 장소 선택
- 시 행 일 2016년 1월

3.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

병무청 징병검사와 ☎ 042) 481-2941

2016년부터는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복수(2015년까지는 1개 은행)로 선정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역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.

- 나라사랑카드는
 - 징병검사 시 병역의무자 본인여부 확인 등 신분인식 기능이,
 - 현역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는 급여 등을 관리하는 전자통장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병역 의무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-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왔으나, 2016년부터는 2개 은행 (국민은행, 기업은행)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,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나라사랑카드 발급 선택권 부여

- 추진배경 나라사랑카드 제휴은행이 복수로 선정됨에 따른 의무자 선택권 부여
- 주요내용
 - ① 2015년도 이전은 신한은행 단수 운영
 - ② 2016년도 부터는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복수 운영
- 시 행 일 2016년 1월